

노동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및 건설사에 대한 제언



글 | 고광훈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사무관 | 전화 : 02-6922-0936 | E-mail : gogga1103@hanmail.net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더 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쌍용 건설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한 명의 산업재해자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산업은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해외공사 수주 등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세계가 놀랄 만큼 높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안전은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희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건설재해에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도 건설업은 사고가 나면 수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구포 열차사고' 부터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최근의 '이천 냉동창고 화재·폭발사고' 까지 슬한 참사를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매년 2만여 명 정도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그중 6백 명 이상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말 현재도 6천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0여 명이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는 18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재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쌍용건설에서도 지난해에는 중대 재해가 다수 발생하였지만 4월말 현재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3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한편으로는 규제가 강화되는 면도 많이 있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계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동부의 건설안전 정책 방향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최근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법·제도개선 및 지도방침

우리의 현실이 주택의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건설, 도로 등 SOC 확충 등으로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도 다양하고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 조기 발주 및 공기단축, 미숙련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 등으로 정부 정책도 단기 대책에 치우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최근 재해를 정체현상 탈피를 위해 제한된 행정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재예방 행정 혁신(사후수습 → 선도적 예방)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안전보건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큰 틀에서는 대규모 현장은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되 대형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중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집중관리, 소규모 현장은 국고에 의한 기술지원 강화로 가는 것이고 제도개선 방향도 이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등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높은 상위 건설업체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금년에 많은 법·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근로자는 이동이 심하여 개별근로자 및 기업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현장 단위의 안전관리보다는 건설산업 차원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에 의거 일용근로자 10만여 명에 대해 기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대형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연말까지 5만여 명에 대해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단위로는 안전관리자 선임 규모인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이상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지만 대형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현장에서는 사소한 부주의, 티끌만한 것을 놓치고 갔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주의는 지도감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 현장은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격히 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추락, 붕괴 등 사고성재해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 업체는 본사 및 동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이상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의 중·소규모 공사는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장은 '건설안전지킴이' 운영(47명, 전국 19개 지역 배치, 2010년 3월 22일부터 운영), 전문 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강화하고, 3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일정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지원 기술지도 실시(2010년도 2만5천 개소, 2011년도 3만 개소) 등 이들 현장도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바꾸고 있고(2010년도 하반기 시행예정), 6월말까지 건설업체 환산재해를 산정이 끝나면 곧바로 건설공사를 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재해율도 조사하여 공표 등을 통해 발주자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재해율 조사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입법화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금년부터는 노·사 자율에 의한 유해위험관리를 위해 '위험요인 자기관리(일선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임) 사업'을 도입하여 우선 대규모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업체에서도 조속히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착공 전에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도 개선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 및 확인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는 지상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 최대 지간길이가 100m 이상인 교량, 지하철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는 안전공단본부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도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제도도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6월에 1회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의 전부도급 또는 일부도급 문제의 시비를 없애고,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교량·갯길·시스템 비계의 안전기준 신설, 그물코 2cm 이내 추락방지망 설치시 낙하물방지망으로도 인정 등 안전기준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계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단계별로 공사참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설계심의위원회에 안전전문가가 참여(국토해양부에 30명 추천)하도록 하여 근로자 재해예방에 우호적으로 설계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2 국내 건설안전의 한계 및 문제점

건설업은 주로 옥외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과 일용근로자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어 작업공정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선진국도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지는 데 우리 건설 회사들이 해외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선진국 못지않게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에 수주 후에는 수차에 걸친 하도급, 성과급 시행, 인부들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선진국과는 다른 건설환경과, 근원적인 안전보다는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땀질식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임시 가설물, 안전 난간·추락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조치 하는 등 '안전 우선', '안전시공'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재해 감소를 소규모 인력으로 지도감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

니다. 따라서 금년에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건설안전의 한계와 문제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전명품 건설명가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

건설산업은 생명을 존중하는 선진화된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매년 대형 사고를 겪고 나면 의욕적으로 안전조직 및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다가도 얼마 못가 시공우선,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작업 수행 등을 반복하는 것은 안전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신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보전을 기업구조에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CEO의 안전의지 피력, 본사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하도급 금액도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실화하여 협력사가 안전보전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체계구축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어려운 건설여건 속에서도 10대 건설업체 건설안전 임원협의회(CSOC)가 구성되고, 안전부서장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전담 임원을 배치하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아울러, 골지의 건설업체 2곳

에서 안전관리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소비자와 근로자의 안전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전은 경영의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식되어 가는 것이 국제적 추세입니다.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 보람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대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나 당사자인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코자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율안전관리 역시 확고한 신념과 관심을 표명하고 술선수범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산재예방의 한 주체로서 산업재해를 줄이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책임의식과 자긍심으로, 산재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10여 년간 정체되어 있는 0.7%대의 재해율이 금년에는 0.6%대로 진입될 수 있도록 쌍용건설이 그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쌍용건설의 발전과 안전관리자 여러분에게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현장의 무재해를 위하여 오늘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읍시다! S

